

논단
&
특집
SPECIAL-



정 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FTA란 무엇인가?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환경의 하나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FTA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하나이다. 지역무역협정은 무역장벽 완화의 정도와 체결국간의 경제통합 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순서로 발전한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체결 당사국 간에만 관세를 철폐하고 체결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이에는 NAFTA 즉, 북미지역자유협정이 대표적 예이다. 다음으로 관세동맹은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역외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MERCOSUR 즉, 남미공동시장이 대표적 예이다.

공동시장은 체결국간 관세철폐 및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 뿐만 아니라 체결국간의 생산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도 제거한다. 즉, 노동력, 자본 등이 국경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이에는 CACM 즉, 중미공동시장이 대표적 예이다. 통합이 더욱 진전되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체결국끼리 금융·재정 정책을 공동 수립하게 된다. 과거 EC가 예이다. 최종적으로 단일시장이 되면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단일통화, 공동의회 등의 설립으로 경제·정치적인 통합을 달성하는데 현재의 EU가 그 예라고 하겠다.

현재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WTO는 148개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대우와 같은 무역장벽 완화 규범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FTA로 대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기본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무차별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FTA에서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분야와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원산지규정, 통관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

역사의 장벽뿐 아니라 투자분야, 무역규범 등을 포함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노동, 환경 분야까지 다루는 등 그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FTA 체결은 각국에게 경제적(정태적·동태적) 이득과 함께 정치·외교적 효과도 창출시킨다. 정태적인 경제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무역창출효과는 체결국이 FTA 체결 이전의 고가 수입품 대신 체결국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저렴해진 역내국의 수입품을 소비함으로써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체결국의 수입품이 기존의 저가 역외국 상품에서 관세철폐로 인해 고가 역내국 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에 비교우위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열세를 보이던 역내국 상품이 관세철폐로 인한 낮은 관세율의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역외국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국내산	역내국	역외국
제품가격	100	90	85
관세(20%)	0	18	17
FTA 체결전	100	108	102
FTA 체결후	100	90	102

한편 동태적 효과는 FTA 체결로 인해 생기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FTA 체결로 무역 자유화가 자리를 잡고 역내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체결국간의 투자, 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역내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TA는 체결국들의 정치 및 외교적 변화를 수반한다. 체결국 간에 빈번해지는 경제 거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각국의 정치 체계의 변화뿐 아니라 나아가 외교관계의 개선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들어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간 FTA처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국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FTA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2. FTA 확산과 그 영향

이념상 다자주의의 WTO 체제와 지역주의의 FTA는 일견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도 현실에서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지역주의협정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전 세계적으로 230여개(2003.1 현재 추정치¹⁾)가 존재하는 가운데 2004년 3월 현재 WTO 가맹국중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전무한 나라는 몽골 뿐이다. GATT(1948년-94년) 체제 하에서 통보되거나 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24개였으나 1995년 WTO가 시작된 이후에만 130개에 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그 중 FTA의 숫자는 179개(2003년 1월 기준)로 잠정 집계된다.

FTA에 둔감했던 나라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FTA 체결 붐 속에서 비(非)체결로부터 우려되는 피해와 상대적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FTA 추진을 검토 중이다.²⁾

예컨대 A국과 B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C라는 제3국은 A, B 양국 어디에서도 무역으로 인한 열세를 극복할 수 없고, 아예 시장 접근조차 불리하여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간 FTA는 물론이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거대 경제블록(EU, NAFTA, MERCOSUR, AFTA)간 FTA 체결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1) 이 중 WTO에 통보되고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195개에 달함. RTA가 신규 체결되거나 가입국이 늘어난 경우 ‘즉시’ WTO지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에 통보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고 CRTA 개최 일수가 너무 적어서 실제적으로 진행중이거나 체결된 FTA 중에서 통보되지 않은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2) 이 개념은 Baldwin의 ‘도미노 이론’으로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을 설명함.

3. FTA 추진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서 FTA가 화두가 되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FTA를 체결하면 NAFTA와 EU처럼 가시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일 큰 요인일 것이다. 실제로 NAFTA 체결 후 1993년에서 2003년까지, NAFTA 역내국끼리의 무역은 2천9백7십억 달러에서 6천2백2십억 달러로 무려 109%나 증가했다. 또한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FDI 규모는 1조3천억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FDI의 28%에 육박하고 있다. USTR(미 무역대표부)은 NAFTA 출범 8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무역 및 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1993년~2001년 NAFTA 체결 후 8년간 '각국 對 NAFTA 무역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무역규모	증감률
미국 對 NAFTA	142 → 265	86% ↑
캐나다 對 NAFTA	117 → 229	95% ↑
멕시코 對 NAFTA	61.9 → 139	225% ↑
NAFTA 對 NAFTA	297 → 622	109% ↑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각각 7년 전후 '각국별 FDI 유입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1994년~2000년 FDI 규모		
	94년 이후 매년 110.2 싹 증가	1994년~2000년 FDI	증감률
미국	1987년~1993년 FDI	1994년~2000년 FDI	거의 4배 ↑
캐나다	5.3	21.4	거의 3배 ↑
멕시코	3.9	11.7	

*자료: USTR

다음으로 다자체제인 WTO에 반해 FTA는 지역주의적인 특성을 가졌다라는 데서 발생하는 장점을 들 수가 있다. WTO의 경우 148개나 되는 모든 회원국들의 구미에 맞는 무역자유화 이슈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 시간과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또한 WTO 협상으로 타결된 양허세율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실행세율과의 괴리로 그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가시화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FTA의 경우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역 및 경제관계의 문제점을 개별국가끼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협상을 제의·타결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 결과가 단시간에 도출되어 현실적인 후생 증대로 직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는 큰 틀을 세우고 그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FTA를 선택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몇 개의 거대 블록을 형성하며 역내국간의 경제적 이득이 실현되는 지역주의가 퍼지면서 한국 역시 FTA를 통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 경제권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③의 결정이나 상대국 정상과의 의견교환이 시발점이 되어 FTA체결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회같은 사전협의 단계를 거쳐 그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 후 FTA 체결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칠레 FTA를 비롯하여 정부 차원 및 민간 차원에서 검토 중인 FTA는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뉴질랜드 FTA 그리고 한-태국 FTA등이 있다. 주요단계별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요 FTA의 단계별 일정 |

	한-칠레 FTA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시발점	-1998. 11: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첫 FTA 대상국으로 결정	-1998 ~ 1999: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의견 교환	-1999.9: APEC 정상회담에서 고속통 총리 제안 -2002.10: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FTA 상대국으로 결정
사전협의 (산·관·학 공동연구회)	- 1998.12 : 한-칠레 FTA 추진위원회 결성	3단계의 사전협의 과정 - 1998.12~2000.04: KIEP와 IDE간 공동연구 - 2001.9~2002.1: 2차례 경제인간 비즈니스 포럼 - 2002.7~2003.10: 산관학 공동연구회	- 2003.3 ~ 2003.9: 3차례의 공동연구회
협상	- 1999.12 ~ 2002.9: 6차례의 협상	- 2003.12: 제1차 협상 - 2004.4: 2차 협상 예정	- 2004.1: 제1차 협상 - 2004.3: 2차 협상 예정
타결 및 비준	- 2002.10.24: 타결 - 2003.2.15: FTA 서명 - 2004.2.16: 국회 통과		
발효	- 2004.4.1: 발효		

3)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조정기능은 1986년 대외협력위원회 규정으로 시작해 그 명칭이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2001년 2월 폐지되어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흡수된다. 그러나 나날이 중대되는 대외경제동향의 중요성에 따라 2001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로부터 분리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되었다.

주요 FTA의 단계별 일정 II

	한-ASEAN FTA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시발점	- 2003.10: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협 강화방안에 합의	- 1999.11: APEC회의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시 태국측 제의	- 1999.7: 뉴질랜드 수상 방한시 제의 - 1999.9: 양국정상에 의해 공동 연구 진행키로 합의
사전협의 (산·관·학 공동연구회)	- 2004.3: 제1차 한-ASEAN 공동연구회	- 1999.11~2001.3: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 2001.3: 연구결과 교환	- 2003년부터 6차례 경제 공동 위원회 개최
협상			
타결 및 비준			
발효			

4. 중전기기산업의 수출 확대 방안

(1) 미래지향형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

국내 중전기기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쟁구도는 미국, 유럽, 일본을 위시한 선진 기업들의 첨단·고기능·고부가가치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과 중국을 선두로 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가들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양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후발개도국가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집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입지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제조업체들의 평균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내 중전기기산업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는 자본생산성 증대에 따른 수익창출능력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수익측면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향후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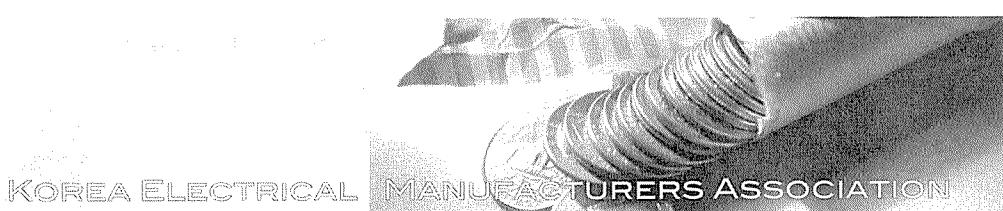
5. 한-칠레 FTA의 영향과 교훈

한국과 칠레 양국간 교역구조를 보면 대 칠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가전제품 등 주로 내구 소비재인 반면 대 칠레 주요수입품목은 구리, 원목, 철광 등 원부자재로 양국교역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보여준다. 한국과 칠레는 각각 공산품과 농수산물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은 FTA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당할 만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FTA 범위를 협상하여 타결하였기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의 국내산업에 큰 타격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품은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반면, 제조업이 취약한 칠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쌀, 사과, 배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포도 같은 경우는 상호보완적인 수확 시기를 이용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칠레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 및 세탁기는 칠레의 요구에 따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사상 첫 FTA라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FTA 고아'라는 오명을 씻으며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나라와 중남미 국가 사이에 체결된 첫 FTA라는 점에서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나라 대외 통상과 외교 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항상 지적받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의 통상 관계자의 빈번한 교체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부처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 4) 한국과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각각 30.6%와 93.4%로 양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극명히 드러내준다.
- 5) 이외에도 민감도에 따른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허용해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합의했다.
- 6) 칠레 역시 제조업 및 공산품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등으로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 조차 이해집단간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여 강력한 반대그룹을 형성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회에서 3전4기 끝에 비준이 통과될 정도로 극렬하게 농민들이 시위를 했던 데는 대국민 홍보 부족이 그 원인이 된다. FTA로 농가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부각된 반면 그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무역수지개선 효과와 구조조정의 이점은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 체결될 FTA는 협상단계에서부터 최종 종료까지 협상·통상 전문가 그룹을 유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국민 대상 홍보와 계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향후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는 이미 알콜성 음료 4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의 실행관세율이 0%이고 관세할당과 같은 수입제한 조치도 없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국가로써 비관세 장벽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 역시 대 싱가포르 수입액의 71%를 차지하는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무역에는 큰 손실이나 이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며 특히 금융,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다. 런던, 뉴욕, 동경에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4대 금융시장에 손꼽힐 만큼 선진화된 금융 산업 구조를 구축해 동북아 금융 허브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금융기관을 영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산업은 물류산업이다. 싱가포르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창이공항의 여객 및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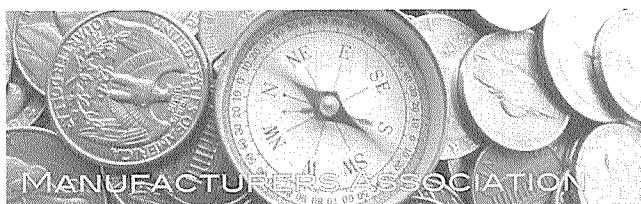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 처리 능력은 각각 세계28위와 9위를 차지하며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달된 물류 산업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꿈꾸는 우리나라에게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의 FTA체결로 정태적 효과보다는 동태적 효과를 기대해야한다.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금융, 물류 및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 발전에 신선한 측면제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ASEAN의 중심국가로 뉴질랜드, 일본,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FTA 허브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 ASEAN, 뉴질랜드 등과 FTA를 추진 중이라 싱가포르의 전례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한-싱가포르 FTA는 향후 ASEAN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동태적 효과도 유발시킬 것이다.

【한-일 FTA】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그 분석모형과 변수에 따라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가 적자와 흑자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대 일본 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현존하는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은 2.9%인 반면 한국의 대일본 관세율은 7.9%이므로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의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 종속된다.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무역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다. 하지만 일본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비관세장벽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그 시정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본은 고부가가치제품, 한국은 저부가가치제품에 특화하여 한국 산업이 일본으로 종속될 우려도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이전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한투자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는 일본의 시장장벽이 높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섬유, 석유화학 등에 있어서 시장개방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복잡한 유통구조, 기술장벽, 민간의 단합 등 경쟁저해적 상관행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가급적 길게 설정함과 동시에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개발, 공동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당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기업규제완화, 노사관계 재정립 등 국내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 FTA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FTA의 도미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EU, 미주 지역의 NAFTA와 같은 경제 블록에 상응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FTA를 완성하기 위한 그 첫 파트너 상대로 일본을 선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갈 것이다.

【한-ASEAN FTA】

ASEAN은 최근 세계에서 신흥 거대시장으로 분류되며 잠재 수요 개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ASEAN 국가들의 내수시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투자가 증대하고 있고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ASEAN 국가를 주름잡고 있는 양대 자본 세력은 일본자본과 화교자본으로 ASEAN 국가들은 일본과 화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ASEAN은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한꺼번에 동남아 10개 국과의 무역 및 경제 교류의 변동을 맞을 것이다. 갈수록 증대되는 한-ASEAN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은 ASEAN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2004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제1차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년 12월 KIEP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중 한-ASEAN FTA가 소비자 후생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ASEAN FTA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수준은 1.15%, GDP는 0.64%, 무역수지는 50~60억불정도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SEAN과의 FTA는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EU와 미주지역의 NAFTA 및 MERCOSUR에 대적할 만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시초가 된다는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ASEAN과 적극적인 협력 추진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모두 ASEAN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 심화하며 자국의 경제적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ASEAN 시장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진출함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FTA체결 상대국에 따라 국내 소비자 후생수준과 GDP증가율 추정치는 한-일 FTA체결의 경우 각각 0.75%, 0.92%, 한-멕시코 FTA체결의 경우 0.08%, 0.55%, 한-EFTA의 경우는 0.06%, -0.0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기업의 대응방안

FTA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인력이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자유화이다. 따라서 그 영향은 무엇보다도 무역업체에 가장 크게 미치므로 무역업체들은 누구보다도 FTA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자신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한다.

우선 협상이전에는 FTA 체결대상국 선정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즉, 무역업계는 자신의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과의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출면에서는 주요시장, 수입면에서는 역시 주요 수입선이 FTA 협상대상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상과정에서는 자기 업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특정 품목이 자유화대상에 포함 혹은 제외되거나, 자유화되더라도 관세철폐 시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오로지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관심 품목이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고 또 관세철폐가 보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산지규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수입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을 가급적 완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가급적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유리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원산지 규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 체결 이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제품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관세철폐에 따른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저렴해지므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수입선을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원자재나 부품을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른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100% 현지생산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HS 세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일정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리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우회수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NAFTA 체결국인 멕시코 현지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후 미국으로 무세 수출할 수 있다.

또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의 반덤핑 제소 남발, 통관 절차상의 번거러움, 각종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위생 및 검역절차 등에 대해 관련단체 혹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FTA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장벽이 제거되도록 할 수 있다. 호주·뉴질랜드 경제협정, 칠레·캐나다간 FTA 등에서처럼 반덤핑 적용을 상호 배제기로 합의할 경우 체약국 간에는 반덤핑 제소가 아예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결국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협상에 활용될 각종 카드나 요구사항은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해야만 한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FTA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유화도 포함되는데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국간 투자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투자확 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조달 시장 참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처럼 기존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게 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일본 등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와의 FTA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양국간 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하는 작업,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